

# 정 학

: 김덕관

관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①	④	③	④	①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①	③	④	③	①	③	④	③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2	재무이론	4
정책이론	6	행정환류	1
조직이론	2	지방자치론	2
인사이론	3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8	생소한 문제	1	100점 방지	1
------	----	--------	---	---------	---

↓  
실질적인 만점: 95점  
고득점: 95점 이상  
반발대상: 85점 이하

▶ 총평

이번 지방직 9급은 실망스럽게도 합격가능한 범위에 있는 분들 간 변별력이 거의 없었던 시험이었습니다. 18문제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문제의 결론만 알아도 기계적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고, 약간이나마 생각이 필요한 문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생소한 문제로 분류한 4번도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없을 뿐 그냥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행정학 “시험공부” 방향 자체를 잘못 잡은 분들과 단원별 기출문제집이라는 “족보”의 결론부터 암기한 분들 간 점수 차이는 명확하게 나간 할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한 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행정학 시험에서 확실하게 점수 따는 요령을 잡은 분들과 아직 점수 따는 공부 요령이 약간 부족한 분들 간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어 아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이러면 ‘행정학 때문에 합격!’은 아닌 행정학은 일단 90~95점 맞고, 다른 과목에서 합격 및 불합격 여부가 나뉘 겁니다.

20번 문제 외에는 전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이니 1~19번 중 틀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원별 기출문제집 회독수를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 같이 거의 출제되지 않으면서 암기할 게 너무 많은 것을 맞추려고 시간을 쓰면 더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지 못해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니 20번 문제는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매년 시험에 나왔던 것을 반복한 분들이 95점 맞았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느꼈을 겁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한 이 출제포인트는 “무엇이, 어떻게” 출제된다고 피 토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된 게 대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진 제 강의 자랑이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라는 족보에 매번 있었으니 강조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항상 기출문제“부터” 결론을 암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절대 “학문을 이해하는 공부”와 “시험에서 점수 따는 시험공부” 중,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혼동하지 말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길 바랍니다.

▶ 문제 및 해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기용 해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효율성(능률성):** 투입 대비 산출  
효과성: 목표 대비 산출(목표달성도)

<이해용 해설>

② (X) 투입 대비 산출은 효율성(능률성)이고, 목표달성도를 나타내는 목표 대비 산출이 효과성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254번(2012 국회8급)]

<보기> 중 효율성(efficien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ㄷ.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비용 내지 투입의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2019 서울시(추)9급 4번]

주요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효과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 ② 업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암기용 해설>

② **업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대표관료제: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역차별 문제 발생**

<이해용 해설>

① (O), ③ (O) 대표관료제는 사회의 출신집단별 인적 구성비율을 그대로 반영하여 관료제를 구성하려는 인사제도이다. 이는 출신집단을 반영하여 대표를 임용하는 소극적 대표성이 임용된 관료가 실제로도 자신의 출신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② (X)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에서는 획일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하지만 출신집단별 할당비율 때문에 객관적인 능력과 자격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우리나라의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료제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 현재 장애인, 지방인재, 저소득층 등에 대한 할당제를 통해 공직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 기출문제 >

[기출문제집 1131번(2015 국가7급)]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염관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 텔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 ②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③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④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암기용 해설>

- ① 전통적 텔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 ▶ 텔파이 기법: 전문가들 의견의 중위값으로 합의(의견일치 유도)

<이해용 해설>

- ① (X) 전통적 텔파이 기법은 전문가들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여 의견들의 공통점인 중위값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 ③ (○) 브레인스토밍은 과정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의견개발이 완료된 이후 평가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501번(2017 서울9급, 지방9급)]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 ① 텔파이 분석

[기출문제집 505번(2012 경찰간부)]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서 정책텔파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불일치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의견들보다는 **의견의 중위값(medium)을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하

문 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 ② 정책실험의 수행
- ③ 협상이나 타협
- ④ 지연이나 회피

<암기용 해설>

-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 ② **정책실험의 수행**
- ③ **협상이나 타협**
- ▶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법**

<이해용 해설>

- ① (X), ② (X), ③ (X)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의 불확실성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불확실성 자체를 제거하려는 것을 적극적 대처방법이라고 한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정책실험의 결과를 확인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원인 자체를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 ④ (○)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처하는 것을 소극적 대처라고 한다. 의사결정의 지연이나 회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극적 대처방법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암기용 해설>

-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 ▶ **광역행정의 장점: 규모의 경제**

<이해용 해설>

- ① (○), ② (○) 광역행정이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초월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이다. 최근 주민들의 생활권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역행정은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데 기여한다.
- ③ (X) 기존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무를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
- ④ (○) 기존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의 균질성을 높일 수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845번(2013 해경간부)]

다음 중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②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확보
- ④ 자유주의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차별화**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암기용 해설>

-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 ▶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상 기관, 국무총리 소속**

<이해용 해설>

- ④ (X)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법률상 기관이며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 기출문제 >

[기출문제집 1651번(2006 서울9급)]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이다.

[기출문제집 1650번(2016 지방9급)]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암기용 해설>

-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 통합재정: 중앙재정 + 지방재정
-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 ▶ 통합재정: 내부거래 차감
-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 ▶ 통합재정: 순계주의

<이해용 해설>

- ① (○) 통합재정(통합예산)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한 재정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 ② (×) 통합재정(통합예산)은 중앙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도 포함한다.
- ③ (×) 통합재정(통합예산)은 국민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재정활동을 위한 지출 규모에 초점을 맞추며, 이에 따라 내부거래를 차감한다.
- ④ (×) 통합재정(통합예산)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주의가 아니라 순수입과 순지출만 기록하는 순계주의에 따라 기록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397번(2015 서울7급)]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예산의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 ③ 통합재정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을 포함한다.

[기출문제집 1398번(2016 국가7급)]

우리나라 정부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외 항목을 포함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는 제외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 ② 선거구 조정 정책
-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 ④ 국유지 불하 정책

<암기용 해설>

- ④ 국유지 불하 정책
- ▶ 분배정책

<이해용 해설>

- ① (○), ② (○), ③ (○) 로위(Lowi)의 구성정책은 정부구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정부조직의 구성원인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선출직 관료 구성과 관련된 선거구 조정 정책,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④ (×) 국유지 불하 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나누어 주는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374번(2008, 2006 국회8급)]

다음의 정책 중 분배정책과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국유지불하

[기출문제집 376번(2012 전환특채, 2001 행정고시)]

정부기구의 신설, 선거구의 조정과 같은 정책은 Lowi가 제시한 정책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가?

- ④ 구성정책

[기출문제집 376번 관련 틀린 선지(2005 국회8급)]

다음 중 정책의 유형과 실제 정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분배정책 - 선거구 조정, 공무원 연금정책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②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암기용 해설>

-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 예산과정: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예산결산
-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 ▶ 예산성과금 제도: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성과금 지급 및 다른 사업에 사용 가능
-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 ▶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을 중심으로 국무회의에서 각 중앙부처별 총액 한도 설정

<이해용 해설>

- ① (×)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예산결산 순으로 이루어진다.
- ② (○) 예산집행의 신속성 확보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면서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집행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이 있다.
- ③ (×)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 및 민간인의 노력으로 예산제도를 개선하여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④ (×) 각 중앙부처별 총액 한도는 각 중앙부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에 따라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을 중심으로 국무회의에서 하향식으로 설정된다.



< 기출문제 >

[기출문제집 59번(2015 서울7급)]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행정일원론보다는 **정치행정이원론**에 가까운 입장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 ②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 ③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 ④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Tip>

기출문제집에서 보지 못한 선지 ①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기출문제에서 매년 나왔던 선지 ②, ③, ④를 소거하여 풀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①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 ▶ **거래적 리더십**

<이해용 해설>

- ① (X)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한 리더십은 X이론적인 합리적 인간관을 가정하는 거래적 리더십이다. 이는 정해진 업무수행 기준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하여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해당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제재(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 ② (O)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중 개별적 배려는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영감적 리더십은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주는 것을 말한다.
- ③ (O)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중 지적 자극은 형식적 관례에서 벗어나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념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④ (O)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도 비전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등 상징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964번(2010 서울9급)]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가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 ③ 리더가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 ⑤ 리더는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기출문제집 963번(2014 경찰간부, 2010 국가9급)]

다음 중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② 현대적 리더십은 감정 및 가치관이나 상징적인 행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권통적 리더십**에 비해 **합리적 귀경이나 교환 귀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암기용 해설>

-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 **에치오니(Etzioni)의 혼합모형**

<이해용 해설>

- ① (O) 린드블롬(Lindblom) 등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한다. 합리모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 ② (O)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합리모형과 달리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인간이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합리모형을 비판하였다.
- ③ (X) 에치오니(Etzioni)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한 정책결정모형은 혼합모형이다.
- ④ (O) 사이버네틱스(정보의 환류) 개념을 활용한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정보의 환류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한정된 범위의 변수만 고려한다. 따라서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도 단순화하여 한정된 범위의 변수만 환류시키려고 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560번(2012 국가7급)]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 한다.

[기출문제집 564번(2018 서울7급)]

드로어(Dror)의 최적 모형(optimal model)에서 말하는 메타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③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C, 난이도 하

문 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Tip>

모든 주민참여제도는 19세 이상의 주민(참여가능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암기용 해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 **19세 이상**

< 해설 >

- (○) 주민소환은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인 지역선거구 의원과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④ (×)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참여제도는 참여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951번(2014 지방7급)]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세 이상의 주민은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기출문제집 1963번(2013 해경간부)]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주민청구조례안은 당해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가 불가하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 ③ 정책지지원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암기용 해설>

③ 정책지지원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신념체계에 따라 지지연합 형성 ⇨ 정책하위체계로 기능

<이해용 해설>

③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원합모형은 비슷한 신념체계별로 지지연합들이 형성되고 이들 간 경쟁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정책하위체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모형이다. 지지연합들은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정책학습을 하고 이에 따라 정책변동이 나타난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학습 및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683번(2016, 2011 국가9급)]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④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암기용 해설>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내적 타당성: 진실험 > 준실험 > 비실험

<이해용 해설>

- ①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진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다. 준실험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험설계로, 진실험보다 준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② (○) 효과가 오직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즉 정책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정확한지의 정도를 내적 타당성이라고 한다.
- ③ (○)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는 정책(독립변수)과 효과(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왜곡하는 제3변수로, 이를 배제해야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 등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을 통한 진실험설계를 하거나 완전하진 않지만 사전측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유사한 점수를 받은 사람을 짝지어 배정하는 준실험설계(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가 필요하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672번(2009 군무원9급)]

실험적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준실험적** 평가방법은 진실험적 평가 방법에 비해 내적타당도가 높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암기용 해설>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 적성, 근무태도 등도 평가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자기평정법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 4급 이상

<이해용 해설>

① (×)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적성, 근무태도 등도 평가한다.

(X)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평정방법은 자기평정법이다.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의 중요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평정방법이다.

- ③ (O) 평정대상자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실적만으로 평정해야 하는데 너무 뛰어난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하여 점수를 낮게 주거나 너무 떨어지는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하여 점수를 높게 주는 것을 대비효과라고 한다.
- ④ (X) 우리나라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제(직무성과 계약제)가 적용되고, 5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가지가 적용된다.

< 기출문제 >

[기출문제집 1205번(2010 지방7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라. 근무성적평정 요소 간의 상대적 비중은 근무성적 5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도 20%이다.

[기출문제집 1186번(2012 지방7급)]

근무성적 평정 방법과 그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자인 감독자와 피평정자인 부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수행을 개선하기 어렵고,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위험이 있다.

[기출문제집 1202번(2007 국가7급)]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Tip>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지엽적인 부분을 암기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한다는 점은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집에도 있는 부분이니 선지 ④를 골라야겠죠?

<암기용 해설>

-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 ▶ 1999년
-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포함된다.
- ▶ 총사업비 500억 이상 + 정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 ▶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이해용 해설>

- ① (X)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에 도입되었다.
- ② (X)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③ (X)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한다.
- ④ (O) 예비타당성조사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정책의 바람직한 정도를 분석하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모두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539번(2014 국가7급, 2004 전북9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② 사업 주무 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100점 방지] 중요도 C, 난이도 상

문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Tip>

이 문제의 정답(선지 ③)처럼 거의 출제되지 않으면서 암기할 게 너무 많은 것을 맞추려고 시간을 쓰면 더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지 못해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니 전부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린 선지로 낼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선지 ①, ②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 의결'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우리나라의 국채: 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

<이해용 해설>

- ③ (X)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이 있다.